

인천의 꿈, 대한민국의 미래

2015 주요업무계획

2015. 1.

 **인천광역시**
<http://www.incheon.go.kr>
[규제개혁추진단]

목 차

I. 일 반 현 황	3
II. 2014년 성과와 평가	6
III. 2015년 정책여건과 목표	9
IV. 주요업무 추진계획	14

I. 일반현황

1 일반현황

□ 기 구 : 규제개혁추진단

□ 인력(정/현원) : 12/12명(일반직 12/12)

□ 조직표 (‘15. 1. 1. 현재)



□ 예 산

(단위 : 백만원)

구 분	2014년	2015년	내 역		
			인건비	물건비	사업예산
계	14	78	27	51	-
규제개혁추진단	14	78	27	51	-

2 주요 현황 및 통계

□ 행정규제개혁위원회

위원회명	설립일자	위원수			위원장	비고
		계	당연	위촉		
행정규제개혁위원회	'98. 8. 10	17	7	10	경제부시장	

□ 등록규제

(단위 : 개)

계	市	중구	동구	남구	연수	남동	부평	계양	서구	강화	옹진
1,864	429	128	126	139	127	157	153	147	122	180	156

□ 규제신고센터 현황

(단위 : 개소)

구분	시	인천상공회의소	군·구	비고
총 13개소	2 (규제개혁추진단 종합민원실)	1 (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)	10 (군·구 민원실)	

II. 2014년 성과와 평가

1 주요성과

□ 민선6기 규제개혁 원년 2014년은 발굴·개선 시스템 구축

- 부서간 얽혀있는 규제를 조정하고자 “현장규제조정회의”를 운영함으로써 기업애로의 신속한 해결 실시(6회)
-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적용하고자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감사관 추가 임명
※ 행정규제개혁위원으로 감사관 추가 임명 : 2014.10.17
- 규제신고시스템 개편
※ ON라인 정비 : 시 홈페이지에 규제개혁신문고 배너 설치 등 정비 ('14.6월)
※ Off라인 확대 : 신고센터 신설(규제개혁추진단, 시군구 민원실) 및 전담인력 배치 ('14.6월)
- 규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마련
※ 市 규제신고고객 보호 현장('14.6월) 및 현장 운영규정 제정('14.10월)

□ 규제등록을 통한 규제 정비로 불합리한 자치법규 해소

- 등록규제 전수조사·자치법규 개정을 통한 불합리한 규제 등 정비
※ 95개 : 폐지 8, 완화 32, 비규제 55
※ (사례) 주차장 설치 관리조례상 ‘노외주차장에서의 주차요금 기산금 부과기준’ 등 다수
- 효율적 등록규제 관리를 위한 미등록규제의 누락등록(238건)

□ 현장 중심의 규제 발굴·개선을 통한 시민체감 개혁 실시

- 기업·시민 등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혁을 위해 민간간담회 개최
※ 규제개혁 민간간담회 : 2회 실시, 안건 15개 발굴·건의
- 중소기업 유관기관 방문(18개 경제단체, 2건), 산단 방문(강화·검단, 4건)
- 기업애로 및 규제 해결 주요 우수사례
※ 환경지침 개정으로 남동산단내 도금배출시설 증설제한 규제해결 ('14.8월)
- 생산유발효과 약 811억원, 600여명의 고용창출, 500여개 업체 수혜
※ 검단일반산업단지내 공장 진출입로 제한 규제 해결('14.10월)
- 직접투자 430억원, 생산유발효과 약 531억원, 고용유발효과 총 516명이상
- 분야별 기업체 규제 설문조사 실시
※ 2014년 : 설문조사(2회 600여 기업, 22건 발굴·해결)

2 평가 및 개선방향

□ 평 가

- 2014년도 규제개혁추진단이 출범한 해로서, 내외적으로 발굴 및 개선 시스템을 마련하고 수요자 입장에서 규제개혁을 실시하고자 다양한 채널을 모색
-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 경제단체와 산업단지를 방문하여 규제애로사항을 청취·해결함으로써 시민감동 행정을 구현
-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등록 감축 목표 10%를 달성하고 경쟁제한적 자치법규를 개선함으로써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기업·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함과 동시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
- 전문교육과정 개설과 공직자 교육을 통해 규제개혁 마인드 함양 제고

□ 개선방향

-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으로 감사관을 추가 임명하였으나, 개선 권고의 실질적인 적극행정 면책을 적용하기 위해
⇒ 감사관실의 적극행정 면책 규정에 위원회에서 기업애로를 위해 권고한 사항은 적극행정으로 감사 면책 적용 실시 건의
- 민간간담회를 통해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혁을 실시하였으나, 구성원 협소로 다양한 규제개혁 발굴의 한계
⇒ 정식적인 규제개선단 발족 구성을 통해 위원 구성의 POOL을 확보하여 다양한 과제의 규제 발굴 모색
- 규제신고센터와 규제신고자 보호제도를 마련하였으나
⇒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시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규제신고자가 공무원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교육실시를 통해 적극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
- 불합리한 등록규제 등 정비로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고 시민불편 개선을 주력한 바,
⇒ 등록규제별 필요성을 전면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제 등 정비대상 지속 발굴

Ⅲ. 2015년 정책여건과 목표

① 여건과 전망

□ 2015년 정책여건과 전망

- 2014년은 행정자치부와 국무조정실 중심의 규제개혁 드라이브 정책이었다면 VIP의 강력한 규제개혁 의지를 반영하여 2015년은 중앙부처별 규제개혁 드라이브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
 - ※ VIP 발언, 일자리창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 단두대 올릴것('14.11.25 국무회의)
 - 반면, 정부차원에서 규제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기업에 투자의 길을 열어주는 각종 개혁법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, 선택과 집중을 통한 투자의 타이밍 상실 우려
 - * IFEZ 규제프리 시범지구(국내기업 조세감면 혜택 등), 수도권 규제완화
- 규제개혁추진단은 2014년 민선6기 규제개혁 원년에 닦아놓은 기반을 바탕으로 2015년은 규제개혁이 인천시 현안 난제의 만능키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현안사항의 걸림돌을 규제 접근으로 해결할 것으로 기대
 - ※ 규제개선단과 규제조정회의를 연계한, 규제개혁추진단과 해당부서간 Two Track 방식에 의한 우리시 현안난제를 규제개혁으로 해결
- 규제등록 정비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으로 규제비용총량제 운영,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불합리한 등록규제 감축 지속 추진 전망
- 지속적인 현장규제 발굴·개선을 통해 기업과 시민이 함께하는 “새로운 인천, 행복한 시민” 시정목표 실현
 - ※ 투자를 창출하고 지역일자리 만들어내는 규제개선 추진
 - 기업 규제애로사항 적극 청취 및 개선 주력
 - ※ 규제하나 해결로 인천시민이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는 규제개선 추진
 - 시민, 소상공인, 자영업자 불편애로사항 적극 청취 및 개선 주력

2 정책목표

규제없는 도시, OPEN 인천

전략 1.

현장중심의 규제개혁
발굴 시스템 구축

- 1 규제신고센터 운영
- 2 수요자 중심의 민간 규제개선단 운영
- 3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 발굴·개선

전략 2.

자치법규 규제개혁을
통한 「규제zero」 어프로치

- 1 규제등록 관리
- 2 비정상 자체규제 개혁
- 3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내실화

전략 3.

규제개혁 문화
형성·파급

- 1 토론회 개최
- 2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
- 3 규제개혁 교육 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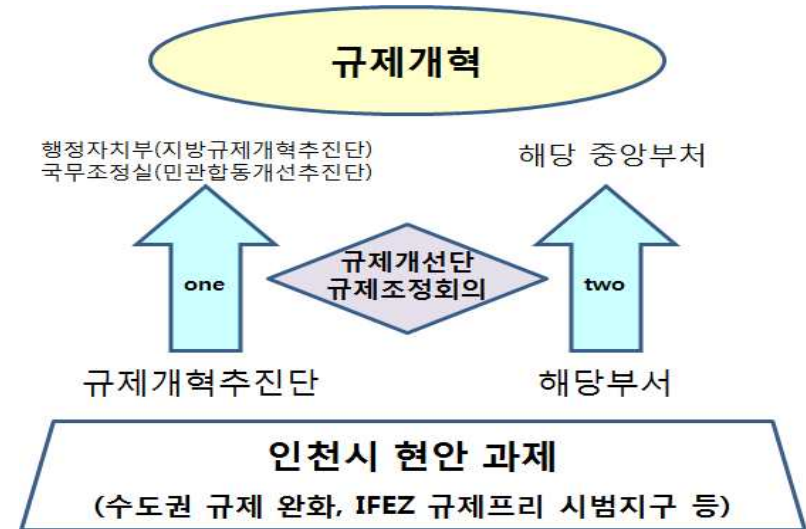
IV.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

브랜드 정책과제

1 인천시 난제 해결의 만능키, 「규제개혁」

1 인천시 난제 해결의 만능키, 「규제개혁」

◇ 규제개선단과 규제조정회의, Two Track 경로 등을 활용하여 우리시 여러 현안과제를 규제 접근으로 해결하고자 함



- 규제발굴을 위한 발굴보고회 개최

⇒

- 2월, 10월
 - 市 현안과제 규제 걸림돌 발굴
- 규제조정을 위한 규제조정회의 운영

⇒

- 다수 부서간 관련 규제 조정
 - * 2014년 실적 : 총 6건
 -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연계
- 규제건의를 통한 규제개혁 달성

⇒

- Two Track에 의한 건의
 - 민간 규제개선단 활용

규제개혁추진단

①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 시스템

② 자치법규 규제개혁을 통한 「규제Zero 인천」 어프로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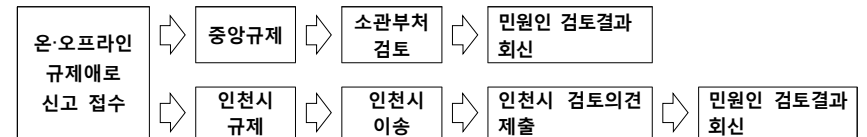
③ 규제개혁 문화 형성·파급

1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발굴 시스템

◇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는 발굴 시스템을 완비함으로써 기업과 시민 등 수요자 입장의 규제개혁 지속 발굴

□ 규제신고센터 운영

- 운영방법 : 온·오프라인 신고 접수 (연중)
 - * 온라인 신고 : 시 홈페이지 민원(규제개혁신문고)
 - * 오프라인 신고센터 : 시 규제개혁추진단·민원실, 인천상의, 군·구 민원실
- 업무처리도



※ 2014년 : 21건(신고수용 7, 기수용 3, 중장기검토 2, 불수용 4, 검토중 5)

□ 수요자 중심의 민간규제개선단 운영

- 구 성 : 민간인 POOL(30여명) 발족(2015. 4월)
 - 공동단장제 운영 : 시(경제부시장), 민간(인천상의 회장)
 - 위촉기간 2년(연임), 무보수 비상근
 - * 실제업무 추진을 위해 대표자보다는 실무진(사무국장, 부장 등)으로 구성
 - 회의개최시 POOL에서 안전제출 및 참석가능자 12명이내로 구성
 - 임 무 : 자문·협업
 - 부서발굴 및 직접건의한 규제에 대한 검토 및 개선안 마련
 - 해당부서와 공동 현장확인, 개선이행 점검, 국회·중앙부처 방문
- ※ 2014년은 사전적 성격으로서 민간간담회 개최 : 2회(15건 처리)

□ 설문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한 규제 발굴·개선

- 기업체 규제 설문조사 실시 : 1회
 - ※ 2014년 : 설문조사(2회 600여 기업, 22건 발굴·해결)
-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유관단체 지속 방문 : 현장방문의 날 운영
 - ※ 2014년 : 산업단지(2회 방문, 4건 개선). 경제단체 방문(18개 단체, 2건 개선)

2 자치법규 규제개혁을 통한 「규제Zero 인천」 어프로치

◇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과감히 정비함으로써 투자유치와 일자리가 많은 「규제Zero 인천」 지향

□ 규제등록 관리

- 등록규제 정비
 - (방법) 등록규제 전수조사, 등록규제 표준화 실시(시·도, 군·구)
 - (대상) 폐지*·완화대상규제 발굴, 비규제 정비, 미등록규제 누락등록
 - * 상위법령 폐지·개정으로 부존재하거나 위임 일탈 불합리한 규제
- 규제비용총량제 운영(※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에 제도도입 추진중)
 - 규제 신설·강화시 비용에 상응하는 기존규제를 폐지·완화

· 인천광역시 등록규제 현황('14.11월 현재) : 1,864건 (시 429, 구·군 1,435)

□ 비정상 자체규제 개혁

- 법령이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미규정한 규제 발굴·개선
- 소관부서별 폐지대상규제 자치법규 개정 추진
- 근거없이 실시되는 탈법규제 대상 발굴 정비

□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내실화

- 인 원 : 17명 (당연직 7명, 위촉직 10명)
 - 기 능 : 규제심사, 기업규제애로사항 심의·개선권고 등
 - 내실화 방안
 - 소관부서에서 불수용된 규제애로신고를 적극 심의, 개선권고 송부
 - 기업애로에 대한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 적용 건의
 - : 행정규제개혁위원회에서 개선권고한 사항에 대한 이행은 적극행정으로 감사 면책
- ※ 2014년 실적 : 6차 개최 (총 안건 11건)

3 규제개혁 문화 형성·파급

◇ 규제개혁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천시의 규제방향을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의 문화파급 도모

□ 토론회 개최 (신규)

- 시 기 : 연 1회 (2015년은 인천지역 끝장토론회 활용)
- 주 최 : 인천광역시(주관 인천발전연구원 등)
- 안 건 : 수도권정비규제 등 우리시 현안과제 논의
- 진 행 : 초청강연, 주제발표, 토론, 우수사례 발표 등

□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

- 대 상 : 불합리한 법령·자치법규 등 규제개선사항 공모
 - 자 격 : 인천시민(공무원 포함), 관내영업장을 둔 기업체
 - 기 간 : 2015. 4월 (연 1회)
 - 방 법 : 인터넷, 우편, 방문, 이메일 등
 - 절 차 : 공모 ⇒ 위원회 심사 ⇒ 선정·포상 ⇒ 개선권고 및 중앙건의
- ※ 2013년 28건 공모(최우수 : 맞벽건축 제한 건축조례 개선), 2014년 미실시

□ 규제개혁 교육 실시

- 규제개선 직장교육 실시
 - 기 간 : 반기별 1회
 - 대 상 : 시, 군구 인허가 공무원
 - 내 용 : 규제법령 정비 사례 소개
 - 인재개발원 「지방투자 및 규제완화과정」 개설
 - 일 시 : 2015. 8월중
 - 대 상 : 5급이하 공무원 및 공사공단직원
 - 내 용 : 규제개혁정책, 등록규제, 규제 발굴·개선 우수사례 등
- ※ 2014년 : 직장교육(1회), 인재개발원(전문교육 2014.8월), 국무조정실 교육(1회)